

“새로운 시대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

이재명 지지 '전북민주평화광장' 공식 출범 “대선 승리 선봉 다짐”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돼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상임공동대표 김윤덕, 김영복)은 14일 오후 2시 전주 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 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전남 본부 상임대표 주철현(전남 여수시 갑), 홍정만(고양시 병), 이해사(서울 강동구),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지문교수단, 법률지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인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와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민, 강용구, 김성수, 이병도, 진형석 전북도위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흥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농경계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덤스 대표변호사, 김은영 시흥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김영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이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또한, 김영호 전안수, 이상일 최창웅 변호사 등을 법률지원단으로,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지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 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장애인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이 14일 오후 2시 전주 교대 황학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식을 통해 “코로나19와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겨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 데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 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어,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에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오늘 전북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퍼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립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호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 개정안 발의

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초광역권 구상 대응 공유하자”

민주 도당, '20대 대선 공약개발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14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20대 대선 공약 개발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임위원장인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이환주(남원·임실·순창(代)) 남원시장, 소준노(우석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성진(전주대학교 교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대선은 나라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지역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백가쟁쟁(百家爭鳴)’에 가까운 다양한 아이디어가 펼쳐진다. 정책 마케팅 시점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전북 역시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공약을 만들어 낼 것인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

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북의 현실을 파악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공간적 산업적 전략과 초광역권 구상 대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자”고 강조하며 “또한, 지역의 쟁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위촉장을 전달 받은 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자료수집 및 조사, 전북도인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인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신영대, 김수홍,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과,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代)) 남원시장, 소준노(우석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성진(전주대학교 교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4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20대 대선 공약 개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 가운데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도의회 행사위 “예비비, 불가피한 경우 집행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4일 제38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갖고, 기화조정실 등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장신4)은 2020년 전북도가 집행한 홍보 예산중 주요 분야와 홍보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매체의 특성과 대상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등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가 아닌 추경 예산 편성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이었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은 예산한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초과 수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보수적인 예산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 시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려할 수 있으므로 세입 여건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학생 정신건강 조례 등 도의회 교육위 통과

조례안 9개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14일 제382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지속기관과 교육지원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중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례가 다수였고, 김희수 의원(전주)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학생이 자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 및 정책의 기반 마련됐고,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더십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능력 함양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확립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조례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수정을 통해 하부면 의원 일부를 수정 가결했고,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9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활동

한복위, 산림박물관 평화동 ‘온평’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연)는 14일 전북도 산림박물관과 전주 평화동 주민 거점 공간 ‘온평’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순창군 북흥면에 소재한 전북도 산림박물관에 방문해 전시관,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전시물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사업을 청취했다.

이어 지역민의 자제적 해결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지난 2월 개소한 전주 평화동 ‘온평’(온동네 평화마을)을 방문해 공유주방, 공유 빨래방 등 공유공간의 활용방안 및 순환지민 회수 로봬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병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민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건위,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14일 제382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방문,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문건위원들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을 찾아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예술·관광분야 사업발굴 주문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지원 예정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전북도체육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 체육영재 발굴을 위해 8월 개최 예정인 체육꿈나무 선발대회,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정민 위원장은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던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극복·기후변화 대응 주도

G7 정상회의 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건 뜻 모아

중 거른 '열린 사회·민주주의 가치 중요'... 한국 등 협력 강조

코로나19 백신 공급·기원 조사... 기후변화 대응 '녹색 혁명'

중국이 민감해하는 시간 모조리 언급... “규칙 기반 질서 수호”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기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비시장 관행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을 모조리 공동 성명 안에 언급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서구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만큼 G7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들은 세계 회강대국들로서 ‘규칙 기반 국제 체계’ 수호에 특별한 책임을 느낀다며 “중국, 글로벌 경제 경쟁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놓고 집단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직접 지명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남중국해 해상 운송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정상들은 ‘더 나은 세계’(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라는 글로벌 경제 협력 사업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대외 투자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다.

ISW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G7이 추구하는 가치에 걸맞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부채 함정’ 비판을 받는 중국을 의식한듯 참가국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협동하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년 만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건을 위한 뜻을 모았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도 주도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발표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뮌iqué)은 “자유롭고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영속적 이상과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에 따라 글로벌 행동을 위한 G7의 공동 의제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두 70개 항목으로 이뤄진 코뮌iqué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과 미래 대비 ▲경제 재확성화 ▲자유·공정 무역을 통한 미래의 번영 확보 ▲녹색 혁명을 통한 환경 보호 ▲전 세계와 협력 관계 강화 ▲민주주의·자유·평등·법치의 가치 증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의 영국인 영국의 초점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했다.
G7 공동성명은 이들 4개국도 ‘열린 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유엔 등 여러 다자 기구들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여기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바이러스의 기원은 ‘자연 발생설’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중국은 관련 정보를 은폐해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7 정상들은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호, 인종차별 반대, 인권침해 대응, 불법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백신 공급·보건 개혁... ‘자유·공정 무역’ 통한 경제 회복 강조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계획들도 제시했다. G7 정상들은 팬데믹 극복에 필수적인 백신을 내년에 걸쳐 전 세계에 10억 회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보건 체계 조율 역할 증진 ▲모든 대륙에서 의약품 제조 역량 강화 ▲보건 위기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백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파타인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특히 “WHO의 시기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 과학 기반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를 촉구한다”며 중국 내 조사사

‘녹색 혁명’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제로·육지 해양 보호
G7 정상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색 혁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총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2025년까지 기후에 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 보존하기로 했다. /뉴시스